

2021년 04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70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1년 04 (Vol.70)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1년 5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김영현, 송유미, 최완영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1년 04 (Vol.70)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소규모 건축물도 신청가능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 노인보행사고 최다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전국 최초 지정
부산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대구시, 공동주택 하자 조기 보수를 위한 준공 전 품질점검단 의무 시행

4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국토균형발전 선도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행안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달성 2025년까지 81% 목표
인천시, 원도심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결위한 2021년 실행계획 마련
울산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의 대처위해 '도시 숲 조성 정책' 추진
경남도, 탄소중립을 위한 '경남도 녹색건축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8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중산층 공공전세주택 공급 위한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국토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국토부, 경남진주 등 3곳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선정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서울시, 빈집활용+자율정비 '소규모 통합 정비사업' 첫 선
서울시, 주택가 방치된 빈집 철거 및 생활SOC조성 비용 전액 지원

광주시, 2045 탄소중립의 실현과 시민체감 녹색도시 전환 위한 사업 추진
광주시, 시각장애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시립점자도서관을 건립
강원도, 21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공모 선정
충남도, 화재 취약 가구 중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경북도, 여관·폐교 등 유헴시설을 활용해 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
제주도, 도심내 공공시설물 미세먼지 저감·회피 공간 조성
제주도, 도내 공공·민간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 확대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6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 체결
행복청, 물리적 '장벽' 최소화위해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통합개발
환경부, 5개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건물 탄소중립 이행계획 점검
행복청,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국가사업 추진기반 마련
국토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 발간
국토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협업 추진
부산시, 경상권 그린리모델링의 효율위한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 공간정보 활용 및 역사적 도시정보 확보 위해 항공사진 제공
강원도, 안전점검 역량강화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안전협약 체결
경남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업무협약 체결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1년 04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소규모 건축물도 신청가능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1.04.26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 완화	-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 마련	-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 -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 확대	-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 통합	-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

서울시, 노인보행사고 최다 전통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전국 최초 지정

보행정책과, 2021.04.19



서울시가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가장 많은 40%가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로교통법」상 지정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만큼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는 올해 1월 제정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 4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도시정비과, 2021.04.19



부산시는 입지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 방안으로 ①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②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④ 사전 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① 재개발 용적률 완화, ②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③ 소규모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④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공동주택 하자 조기 보수를 위한 준공 전 품질점검단 의무 시행

건축주택과, 2021.04.18



2014년부터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제도화돼 2021. 4. 12.부터 300세대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의무적 시행으로 전문가의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구·군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대구시는 구·군에서 신청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등 품질점검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주택법이 개정 시행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국토균형발전 선도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복합도시정책과, 2021.04.07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h·70km 거리) 등을 감안하여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하여 총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되었다.

행안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70.2% 달성 2025년까지 81% 목표

지진방재정책과, 2021.04.29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3,075개소 중 13만5,62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전국 공공시설물 의 내진율 70.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에 7천987억 원을 투입하여 6천187개소(중앙 4,767개소, 지자체 1,420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였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2,503개소, 3,12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건축물(1,577개소, 2,119억 원), 도로시설물(933개소, 1,01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내진율이 37.3%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약 33%p가 증가하여 이번에 70%를 넘어섰다.

인천시, 원도심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결위한 2021년 실행계획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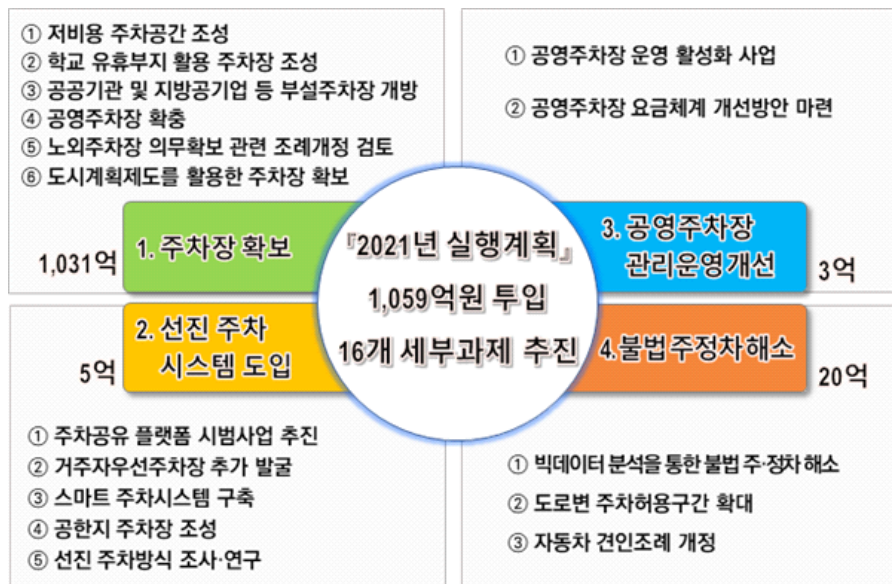
교통관리과, 2021.04.22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3월 주차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한데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2021년도 주차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1년 주차종합 실행계획에는 주차장 확보, 선진 주차시스템 도입,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개선, 불법 주정차 해소 등 4개 분야, 16개 세부과제가 담기며, 이를 위해 올해 총 1,0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 유희부지 활용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등이 추진되며, 선진 주차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주차공유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 2021년 주차종합 실행계획 주요 내용]

울산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의 대처위해 ‘도시 숲 조성 정책’ 추진

녹지공원과, 2021.04.05



울산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 한 해 ‘도시 숲 조성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울산시는 시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녹지정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도시숲 조성 정책’]

미세먼지 차단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주변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의 도심 유입을 막고 공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미포산업단지와 신일반산업단지 주변 14.6ha이며, 19년부터 21년까지 사업비 102억 원(국비 51억 원, 시비 51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낮춤수종 16만 그루를 식재
도시 바람길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외곽의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 내부로 유입하는 연결 숲을 만들어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사업 - 22년까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을 투입해 도심 곳곳에 20ha의 대규모 숲을 조성 - 울주군 온산을 신일반산업단지 경관녹지 10ha와 북구 효문동 완충녹지 7ha
학교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숲의 가치를 체험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 - 중구 성신고등학교와 동구 현대공업고등학교, 북구 메아리학교 3곳이며,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에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갖춘 숲을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신규 사업 - 남구 백합초등학교와 동구 미포초등학교, 북구 매곡초등학교 도로변에 띠 녹지를 만들어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증강현실을 활용한 정원 체험 교육도 실시

경남도, 탄소중립을 위한 ‘경남도 녹색건축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건축주택과, 2021.04.27



경상남도가 2030년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30.2% 감축하고, 일자리 3천여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녹색건축이 대두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건축설비 등 지역의 녹색건축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경남도는 5월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2년부터는 도 및 시군에서 건립하는 5백㎡ 이상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한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민간노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경비실, 청소원 휴게실,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그 밖에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건축물 수소연료전지 설치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녹색도시화 추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통한 기술지원 및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중산층 공공전세주택 공급 위한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공공주택지원과, 2021.04.08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1~’22 한시사업)이다.

* 건설 前 ‘LH·SH-민간사업자’간 매입약정계약을 체결, 준공 後 LH·SH 매입
→ 입주자 특성에 맞는 설계를 적용하고, 우수한 품질의 신축주택 확보 가능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천호, 경기·인천 3.5천호 등 총 9천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 지원 내용]

대출보증 특약상품	-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HUG)
공공택지 분양 우대	-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
세제혜택	-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

국토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주택정비과, 2021.04.07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

*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부, 경남진주 등 3곳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선정

도시재생정책과, 2021.04.15



국토교통부는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남진주 등 3곳의 사업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도시재생인정사업 방식으로 국비 등이 지원된다.

* 안전 DE등급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선정 대상]

경남 진주시	- 30년간 방치되어온 구)영남백화점 건물을 철거하고 진주시의 거점 아동복지센터로 조성 - 면적 : 5,960m / 사업비 : 198.1억원(국비 50억, 지방비 148.1억)
경북 청도군	- '72년에 준공된 노후 공용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여 다양한 주민 소통공간과 공용주차장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생활SOC 시설로 조성 - 면적 : 8,300m / 총 사업비 : 210억(국비 50억, 지방비 160억)
경기 여주시	- '85년에 지어진 시민회관(안전등급 D)을 그린리모델링하고 생활 SOC시설을 증축하여 '시민아울센터'로 탈바꿈 - 면적 : 2,912m / 총 사업비 : 100억(국비 50억, 지방비 50억)

국토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 15곳 선정

도심재생과, 2021.04.20



국토교통부는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 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5곳*을 최종 선정 발표하였다.

* 서울(서대문구), 대구(달서구, 동구), 인천(동구, 중구), 경기(광명), 충남(서산, 천안), 전북(김제, 전주, 정읍), 경북(경주, 성주), 경남(고성), 제주(서귀포)

이 사업은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되어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서울시, 빈집활용+자율정비 '소규모 통합 정비사업' 첫 선

주거환경개선과, 2021.04.05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생활SOC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노후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빈집과 연결한 민간의 노후주택을 합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새 건물을 짓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민간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SH공사와 민간 토지주가 함께 '주민합의체'를 구성·운영하되, 설계~시공 등 사업 전반은 민간이 주도한다.

SH공사는 쓰임 없이 방치됐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임대주택 건설비용과 공급기간을 줄이고, 민간 토지주는 분양리스크를 줄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로 주목된다.



서울시, 주택가 방치된 빈집 철거 및 생활SOC조성 비용 전액 지원

주거환경개선과, 2021.04.28



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시와 자치구가 모두 부담(시:구=5:5매칭)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주차장, 동네정원, 쉼터 등 생활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철거비 뿐 아니라 조성비도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시:구=9:1매칭)해준다.

광주시, 2045 탄소중립의 실현과 시민체감 녹색도시 전환 위한 사업 추진

기후환경정책과, 2021.04.11



광주광역시가 2045 탄소중립의 성공적 실현과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도시 전환을 위해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2,659억원을 투입해 대기산업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 체계 확립, 푸른 도시 조성, 깨끗한 수질관리 및 친환경 하수관리 등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환경도시기반과 자연환경보전 사업 32개 124억원, 대기질 개선사업 34개 567억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59개 414억원, 도심 속 녹지 확충사업 72개 876억원, 건강한 물환경 조성사업 32개 498억원, 친환경 하수관리 사업 12개 66억원 등이다.

광주시, 시각장애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시립점자도서관을 건립

문화기반조성과, 2021.04.11



광주시는 시립점자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1월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 ‘환대의 도서관’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작품을 선정했다.

시립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광주시시각장애인 복지관 인근부지에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20㎡,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도서를 비치하고 점자도서열람실, 점자인쇄실, 제본실, 음성녹음실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다목적홀 등을 갖춘 공공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21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공모 선정

건축과, 2021.04.13



강원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비 236억원을 확보하였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겨울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보다 앞당겨 전국 최초로 ‘2040 탄소중립’선언한 강원도의 정책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5일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강원대학교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대학 등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은 물론 사업시행 이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의 검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충남도, 화재 취약 가구 중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화재대책과, 2021.04.08



충남소방본부가 오는 11월까지 도내 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도 소방본부는 독거 어르신 등 화재에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대상을 확정하고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1가구당 주택용 화재경보기 2대와 소화기 1대가 설치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경북도, 여관·폐교 등 유헴시설을 활용해 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

관광정책과, 2021.04.04

진행

건축
정책

문화
관광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TTP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에 봉화군이 선정되어 국비 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KTTP 사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자체만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유헴시설을 활용해 특색있는 숙박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봉화군은 소천면 분천리 일원에 위치한 폐교 부지인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를 숙박시설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분천 산타마을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분천분교의 시설규모는 9,587㎡로 부지에 숙박시설, 식당·카페, 세미나실, 산타 체험관·박물관·전시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부지에는 캠핑장, 물놀이 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도, 도심내 공공시설물 미세먼지 저감·회피 공간 조성

생활환경과, 2021.04.05

진행

건축
정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5일부터 16일까지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대상지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1차 공모 이후 두 번째 공모이다.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은 공공시설물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등을 활용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 1억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휴식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시설물은 4월 중 해당 시설 관계자와 협의 후 미세먼지 취약 시설 밀집도, 고농도 미세먼지 지역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도내 공공·민간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 확대

장애인복지과, 2021.04.22



건축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 확대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 등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

제주도는 지난 2017년 2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시행 지침」을 자체 마련해 인증제 의무시설을 당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증축(재건축)하는 공공건물 및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인증을 취득하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증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 총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간건축물에도 인증 취득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4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시공원 등도 추가된다. 이에 도민들이 법률안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건축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사항 심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 체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 2021.04.09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을 4월 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전기획, 설계 등 미래학교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학교시설사업의 기존 설계 방식과 다르게 사전 기획과정을 두어 학생과 교원 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건축전문가와 교육과정전문가가 반영·구현하는 공간 기획과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건축 설계와 공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관·학이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 주요내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설명회, 워크숍 개최	- 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역량 있는 건축가들이 미래학교 설계·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설계 공모전 등 관련 행사 개최 협력	- 건축 설계 및 실내공간 디자인 분야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학교를 사전 설계하는 공모전 행사 협력을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
미래학교 관련 학술·연구활동 활성화 및 교육현장에 전문가 인력풀 지원	- 관련 행사(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미래학교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인식 제고 - 사전기획과정과 설계 단계에서 사업 대상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관련 전문가 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

행복청, 물리적 '장벽' 최소화위해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통합개발

도시정책과, 2021.04.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다솜리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통합개발은 생활권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공공 시설들 간 물리적 '장벽'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공공시설을 함께 설계·시공·운영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기존 복합단지(학교+공원+복합) 기능에 특화주거·상가·문화시설 등을 추가하여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하며, 통합 설계를 넘어 통합시공 과정까지 협력을 확대시켜 건설품질을 상향 평준화하면서 공기지연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5개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건물 탄소중립 이행계획 점검

기후전략과, 2021.04.19



환경부는 4월 19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에서 공공 건물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건물과 시설물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이번 회의에 앞서 환경부 장관은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최하는 업무협약에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심 건물의 주요 에너지자립 수단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실증시설(테스트 베드)을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한국수 자원공사에서 받은 실증 자료를 활용하여 효율성 검증,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건물의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 홍보 및 사업 본보기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복청,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국가사업 추진기반 마련

도시정책과, 2021.04.19

완료

국토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지능형도시 국가 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을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약 470만㎡, 전체 사업면적의 6.4%)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사완료 공고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으로, 미리 마련한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 중앙행정기관1호, 대통령기록관2호, 국립수목원3호, 국립중앙도서관4호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 추진지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호

국토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 발간

도시재생역량과, 2021.04.22

완료

도시
정책

건축
정책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하 도시재생 시설)* 운영 사례집 「모두가 행복한 그곳」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공동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시설의 우수 운영사례를 지자체, 주민공동체 등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사례집 발간을 기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 지자체로부터 도시재생 시설을 주민 등이 참여, 운영하는 사례를 신청 받았다. 이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조직 운영, 시설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6곳 중 7곳의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였다.

국토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협업 추진

녹색건축과, 2021.04.29

완료

건축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2050 탄소 중립과 기존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해당 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실질적 협력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서울시 주관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지난 23일 체결하였다.

* 건축물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관리(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규제), 서울시 소유 건물 대상 시범사업(21년~, 51개소)

향후 각 기관들은 법·제도적 지원방안 모색(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시행(서울시) 및 기술지원(건설연) 등 각각의 주요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총량제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토대로 한 다각도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 기관별 주요역할]

부산시, 경상권 그린리모델링의 효율위한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건축정책과, 2021.04.07



건축
정책



환경

부산시는 4월 8일 ‘경상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발대식’에 참석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 및 업무협약은 경상권 그린리모델링 선도기관 설정 및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상권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회, 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운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경상권 플랫폼 선도기관인 ‘경북대’, 경상권 플랫폼 협력기관인 ‘동아대’, ‘경상대’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지역 역량 강화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공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식·기술 함양 기회 제공, 취업 및 창업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상권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 플랫폼 실시 교육, 세미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조 및 지역 구성원 등의 참여 유도, 그린리모델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대구시, 공간정보 활용 및 역사적 도시정보 확보 위해 항공사진 제공

토지정보과, 2021.04.18



도시
정책

대구시는 공간정보의 다각적 활용 및 역사적인 도시정보의 확보를 위해 1973년부터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 약 13만 2천매를 공공기관은 물론 학술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토지이용상태와 건축물 현황 및 공간정보 파악 등 주요 현안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항공사진은 과거 대구시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변천의 역사적인 자료이지만 현재 공공기관이 90% 이상 이용하고 있다.

강원도, 안전점검 역량강화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안전협약 체결

건축과, 2021.04.16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안전점검 역량강화를 위해 시설물 안전 점검의 경험이 풍부한 국토안전관리원(강원지사)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5월부터는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재해에 취약한 노후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통해 건축물 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16일(금) 강원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점검 기술 인력 및 장비 지원,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안전교육, 신공법 정보교환 등으로 건설 산업안전과 재난·재해 대비 생활안전을 위한 건축안전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경남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업무협약 체결

건축주택과, 2021.04.08



경상남도는 8일, 국토안전관리원, 경상권 4개 광역자치단체(부산, 울산, 경북, 대구)와 3개 대학(경상국립대, 경북대, 동아대)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사업공유, 지역기반 강화, 전문가 양성, 창업지원 등을 공유하고 사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 했다.

협약에 참여한 9개 기관 외에도 경상권 24개 협력기관이 참여한다. 플랫폼 참여기관은 전문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 시공자, 플랫폼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사업별 공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에너지 성능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